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

- 일시 : 2021년 1월 4일 14시
- 장소 : 국회 정문 단식농성장 앞

-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연명 :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유족협의회 (가나다순)

○ 프로그램

- 사회 : 최 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피해자 발언1 :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
- 피해자 발언2 :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피해자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 피해자 발언3 :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 산재사망 유족 발언 : 김선양 (광주 조선우드 故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 연대 발언 : 이진숙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서면 입장 :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 · 춘천봉사활동인하대희생자기념사업회

피해자 발언

조순미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표)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 조순미입니다.

평범한 국민으로 이 나라에 보통국민으로 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가족을 예고없이 떠나보낸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이 강추위에 식음을 전폐하면서까지 이렇게 지키려는 그것이 떠나보낸 이의 슬픔에 몇 배의 고통인지 알기는 한 건지요. 정권이 바뀌면서 표몰이로 거론만 되다가 사라져 버리던 법. 여러 중요법안 중 모든 국민에게 꼭 필요했던 법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 정권의 화두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만큼 더 중요할 것이 있겠습니까? 노동자의 산재, 힘든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재해도 아무것도 모른 채 신뢰로 구매하고 사용한 것들이 대기업들의 고의적인 은폐와 윤리를 저버린 욕심으로 수만 수십만의 국민은 허망한 죽음과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의 참사인 가습기살균제참사는 현재 진행형인 전형적인 대기업이 내던진 참사입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한 법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이 변명처럼 늘 해왔던 말 소송의 남발과 경제의 침체를 핑계로 미기만 했던 징벌적 손해배상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모든 법은 꼭 제정되어 국민을 구제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법입니다. 법을 어긴 자는 작든 크든 그 크기에 비례한 배.보상과 처벌과 사죄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억울하고 분한 건 왜 국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국민을 지켜줄 곳은 국가이고 정부입니다. 정부가 법에 강력하게 정해야 할 고의적 참사를 대기업 . 중소기업들이 반대하는 상황을 이용해 시민재해라는 문구로 함축하지 말고 원안대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995년부터 착한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속여서 수천 명의 사망자를 만들고 증거를 인멸했던 대기업들이 법정에서 사람 1명 살인한 것보다 적은 형량을 받고 누리는 시간은 결국 국가가 외면해서 벌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평범하게 일하다가 이렇게 산소를 쫓고 고칠 수 없는 환자로 한가정을 망가트린 죄인으로 서 있어야 하는 이유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올바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여 우리의 가족들을 따뜻한 가정으로 돌려보내 주는 것으로라도 늦게나마 한을 풀 수 있게 한 명의 국민도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부탁드립니다.

피해자 발언2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은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한 법입니다!!

우리는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의 엄마 아빠들입니다. 집행위원장 예은 아빠 유경근, 추모사업부서장 호성 엄마 정부자, 시연 엄마 대외협력부서장 윤경희입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약속이행 의지 천명을 요구하며 열 이틀째 청와대 앞에서 노숙 농성을 하다 달려왔습니다. 국회와 청와대 모두 다른 곳보다 더 चु기기는 마찬가지지만 벌써 삼십 일 가까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온전한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감히 힘들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입니다. 이 법은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법입니다. 생명과 안전 앞에서 재해의 구별과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재해이든 유가족에게는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를 잃었다는 비참한 현실만 남습니다. 그래서 명백히 산업재해가 아닌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인 우리가 이 법을 준비하고 국민동의청원을 하고 국회 통과를 위한 투쟁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의 목적이 내 가족과 이웃이 어떤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숨 걸고 일터로 나가고, 목숨 걸고 가슴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목숨 걸고 수학여행을 가야 하는 대한민국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은 이런 법입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 산업재해예방과 기업 처벌만을 위한 법인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특히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노동자와 시민을 분리시키려는 모습을 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민의 안전권 확보와 중대재해사고 방지’라는 법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입니다.

발의안에서 설명하는 법안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 기업 등이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법을 제정하

여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국회는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장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곳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게다가 안전권, 생명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회는 시민의 생명을 소모품 취급하고 안전을 거추장스러운 비용으로 여기는 일부 기업 등을 위한 ‘중대재해기업보호법’ 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국회는 생명을 살릴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기에 결국 304명을 죽게 만든 세월호 참사를 반복하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21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을 즉시 제정하십시오!!

피해자 발언3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저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허경주입니다. 제 막내 동생이 스텔라데이지호의 이등항해사 허재용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한 지 곧 4년이 되어 갑니다. 그러나 제 남동생은 사망자 신분도 되지 못한 채 여전히 실종자 신분입니다. 저희는 지금도 동생의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고,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라는 통지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1차 심해수색을 통해 제 동생일지도 모를 유해를 발견했음에도 정부가 수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로 인하여 22명의 꽃다운 청춘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지만, 이런 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인 폴라리스쉬핑은 현재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누구 하나 제대로 사과하는 이조차 없었습니다. 만약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스텔라데이지호는 낡아빠진 유조선이었습니다. 일본에서 15년간 운항하다가 폐선하려던 유조선이었습니다. 그런 낡은 배를 중국에서 개조하여 화물선으로 운항하도록 승인해 준 곳은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선박 안전검사를 제대로 시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위탁업체에 내맡기고 나 몰라라 했던 곳도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이윤만을 우선시하며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뒷전으로 내팽개쳤던 파렴치한 선박회사를 관리 감독할 책임도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스텔라데이지호 참사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쉬하며 시간만 끄는 사이에 스텔라삼바호는 불이 나서 한 달이나 바다 위를 표류해야 했고, 스텔라배너호는 브라질 앞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선원들은 또다시 생사를 넘나들며 극도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 경찰이 아닌 민간인의 사고에는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뿐만 아니라 시민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그리고 공무원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내 돈 주고 샀던 가슴기 살균제가 내 목숨을 갇아먹고, 수학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갔다가 산사태에 목숨을 잃고,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가다가 불에 타죽는 상황을 대체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 정부가 개조 운항을 허가해 준 선박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실종 되어도 ‘국가가 왜 나서야되냐?’ 고 반문하는 이 상황을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시민재난참사 발생에 구조적 원인을 제공하고도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 자르기로 도망가는 기업의 경영책임자, 기업과 현장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는 정부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시민재난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청구한다’ 는 명확한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진짜 책임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것만이 제대로 된 재발방지책입니다.

누구나 시민재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시민재난참사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식이 목숨을 위협받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반드시 제대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산재사망 유족 발언

김선양 (광주 조선우드 산재사망 故 김재순 노동자 아버지)

삶이 뒤틀려버린 2020년이 지나고 새해 2021년을 맞이한 지 4일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도 국회 법사위 의원님들께서는 집에서 편히 쉬고 계셨나요? 가족을 자식을 가슴에 묻은 유족들은 자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제2의 김군, 김동준, 김용균, 김태규, 김재순 노동자처럼 시키는 일을 하다 죽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일하게 해달라 요구하며 냉기가 가득한 난장에서 30여일 가까이 곡기를 끊고 있습니다

저희 유족들과 시민들은 21대 거대 양당 국회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시민과 노동자들이 희생되어야 제대로 된 법안 제정해주실 겁니까? 21대 초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대 국회 때 의석수가 자라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했다 호소하며 21대 국회에서는 일하는 국회, 국민과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일을 하겠다 하여 초 거대 여당이 되었는데 이제껏 국민과 시민, 노동자를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더이상 국민과 시민, 노동자와 가족을 잃은 유족의 고통과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기업주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법안 만들지 마십시오.** 10만 국민청원으로 이루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말도 듣지 말고 원안 그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 해주십시오.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처럼 생색내는 법 제정은 국민과 시민, 노동자의 울분을 키우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이 이 나라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 초석임을 잊지 마십시오. 더이상 우롱하고 기만하는 법 만들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10만 국민청원으로 이루어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원안 그대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연대 발언

이진숙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장)

마음을 추스르기가 힘듭니다.

어제도 회사 중역이 온다며 청소 투입되었던 하청노동자가 안전장치도 없이 일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은 이제 그만 되어야 하고, 살아서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 제정을 꼭 1주일 전에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논의하겠다는 국회는 31일도, 오늘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참담합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제10조입니다. 그런데 국가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까? 되풀이되는 참사의 원인은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이웃이 다치고 죽는 참사가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국민 동의청원으로 제출된 법안을 놓고 국회는 대체 무얼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윤에만 몰두하는 기업과 그 책임자에게, 무책임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에게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석면광산 터 위에 들어선 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 인해 충남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은 2013년부터 고통을 호소하였으나 청양군과 충청남도의 법적 분쟁으로 7년이 지난 올해야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산의 석유화학단지인 대산공단 인근 화곡1리 주민들은 바람에 오염물질이 마을로 와서 50여명의 주민이 암으로 유명을 달리했고 현재도 병을 앓는 주민이 많습니다. 기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18년째 지키지 않고, 지자체가 손 놓고 있는 사이 주민들은 매일 장송곡을 틀며 시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도 쓰고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며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이윤 때문에 생명을 저버리는 것은 중단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정부가 위험방지의무를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훼손 없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서면 입장발표 대구지하철참사의생자대책위원회

법다운 법,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하며...

더이상 노동자의 일터가 죽음터가 되지 않도록, 더이상 시민의 생활공간이 죽음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지 말라.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한시바빠 서둘러 달라.

오랜 기간 노동자, 시민의 힘겨운 투쟁과 뜻있는 정치인 등의 노력으로 입법 문턱을 향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어이없고 황당한 정부(안)으로 표류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첫째, 공무원, 사업주와 원청(발주처) 등 진짜 책임자가 책임져야 한다.

①공무원(기관장)을 처벌 대상에서 빼버렸고, ②위험의 외주화와 바지사장을 용인한 것은 법 제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다. 이것은 감독과 심판은 규칙을 지키지 않고 선수와 관중들에게만 규칙을 강요하는 엉터리 제도로 또 다른 참사와 사망을 부르는 초청장과 다름 없다.

192명의 사망자와 148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지하철 참사의 책임자는 방화범도, 마스크키를 뽑아 탈출한 기관사도 아닌 ‘불쏘시개 전동차를 허용한 자’이다. 불타지 않는 전동차를 비싼 값에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싸구려 전동차를 팔 수 있도록 허용한 공무원들이 바로 참사 책임자임을 우리는 안다. (이후 수많은 방화시도가 있었지만 사망 사고가 있었던가?)

둘째, 누구에게나, 즉시 적용되어야 한다.

①2명 이상의 사망자로 중대재해 범위를 제한하고 ②50인 미만 사업장 4년 유예, 100인 미만 사업장 2년 유예하자는 것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안)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1명은 사람이 아닌가? 누구라도 타인의 생명을 담보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업주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만큼, 죽어가는 한 명의 목숨과 그 가족의 행복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업장 규모별로 4년, 2년 유예를 하자는 것은 대한민국은 그때까진 매일 7명씩 죽어도 좋다는 살인면허를 주겠다는 것인가? 단 하루라도 빨리 노동자의 일터가 죽음터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 되고, 시민들의 생활공간이 죽음 공간이 아니라 행복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법시행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국회가 정부(안)이 아니라 운동본부와 정의당(안)을 기초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면 입장발표

춘천봉사활동인하대희생자기념사업회

재난참사를 막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실질적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처벌규정이 필요합니다.

2011년 7월 27일 춘천에서 과학 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인하대 학생들 중 10명이 사망하고 2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직접 원인은 산사태였습니다. 두 차례 산사태로 13명이 사망했습니다. ‘산사태가 왜 일어났을까, 산이 무너진다고 사람이 죽어야 하나’ 라는 질문을 족들이 나서 참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같은 곳에서 10년 주기로 세 번째 산사태가 일어났고 같은 민박집에 묵었던 8명은 그 동네 지인의 연락을 받고 대피해 피해가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참사 책임은 비를 내린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산사태가 반복되는 곳에 배수로도 없이 숙박업소를 허가한 춘천시, 소양강댐 아래 위험지역이어서 비상연락체계가 갖춰져 있었음에도 외지에서 온 숙박객들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업소 주인이 만든 참사였습니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강원도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춘천시장의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유족들과 뜻을 같이하는 이들이 투쟁했습니다. 2년 만에 강원도 조례 제정을 통한 명예 회복, 춘천시장의 사과 등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책임지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춘천시장의 답은 “법대로 하세요. 법이 하라는 대로 책임지겠습니다.” 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럿 죽어 나가도 말단공무원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되는 게 법이었습니다. 그들이 가해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도 우리 몫이었습니다. 씨랜드 참사 때도 그랬고 태안 해병대 캠프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인명 피해를 낸 업주들은 업체 이름을 바꿔 그 일을 또 합니다. 법은 춘천시장이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법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도대체 어디에 책임자 처벌을 호소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피해자들이 생업마저 포기하고 거리로 나서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이들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을 만들어 그들의 예방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참사는 원인 조사도 해보지 못한 채 피해자 몫으로만 남아왔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재 아닌 참사가 없건만 참사는 반복되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 예방과 재발방지에 애쓸 필요도 없어서겠지요.

그렇기때문에 상존하는 위험이 현실이 되거나 예상치 못한 위험이 닥쳐 어느 날 갑자기 재난 참사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은 재난참사에 대한 인식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으로 국회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인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꿔 반복되는 참사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기자회견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요구합니다.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즉각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 재난참사 피해자들은 국회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 맞닥뜨리고, 이 죽음의 원인을 알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재난과 참사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운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참사는 사람의 생명보다 이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과 그것을 용인하는 사회,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정부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수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은 것은 옥시레킷벤키저 등 기업이 유해성 실험결과를 은폐하며 버젓이 상품을 생산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대구지하철참사는 불에 취약한 내장재를 사용했고, 피난로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구지하철공사의 책임입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두 동강 난 것은 정부와 국회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기업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하대 봉사단이 춘천에서 목숨을 잃은 것은 산사태라는 자연재해 때문이 아니라, 군부대가 철수하며 산을 정비하지 않아 산사태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이고, 산사태 위험지역에 민박집 허가를 해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이 싸우지 않으면 원인조차 밝힐 수 없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피해,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사고는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만 징역 6년을 받았을 뿐입니다. 대구지하철참사에서는 기관사만 책임을 졌습니다. 부실시공으로 10명이 숨진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에서 원청인 코오롱 건설은 기소도 되지 않았고, 신축 서류 위변조를 도운 공무원은 벌금 300만원이 다였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잃은 씨랜드 참사에서 불법적인 결탁이 밝혀진 화성 군수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와 국회가 오히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기업과의 결탁에 의한 위험한 인허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인허가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 처벌조항을 삭제하자고 합니다. 참사가 발생해도 기업의 손해가 적으니 기업들이 위험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삭제하거나 형량을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0만의 국민동의청원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하십시오.

시민들은 안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권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혹은 나 자신이 피해자가 되고 나서야 이 아픈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2021년 1월 4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피해자총연합,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 춘천봉사활동 인하대희생자유족협의회 (가나다순)